



12년

기업·소상공·미소 짓는 민생경제 대도약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5년 1월 24일 금요일 (음 12월 25일) 제3672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완주·전주 통합 현실화 이뤄지나

행안부 소속 미래위 '특례시 기준 50만명으로 완화' 주문 등에 따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 높아져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개편 방안이 포함됨에 따라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가 제시한 완주·전주 통합특례시 지정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민선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2025년을 맞아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대응한 자치제도의 변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위를 출범시켰고, 이달 22일은 인구구조, 경제구조, 교통·통신, 지방재정 측면에서 향후 20년 이상의 변화상을 분석하고 시군 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 8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이다.

그동안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주민 생활권이 다른 광주·전남과 호남권으로 묶여 정부 예산 배분, 기관설치 등에서 차별을 받아왔고, 전주시와 완주의 생활인구는 평균 96만명, 최대 104만명에 달해 광역시와 비슷한 정도의 지역 중심도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에 못미쳐 특례시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김관영 도지사는 "완주·전주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하여 더 많은 권한 속에서 공공시설 이전, 관광·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 전주·완주를 잇는 SOC 등 독자적 도시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하여 광역시가 없는 전북자치도의 강하고 단단한 중추도시로 육성하겠다"라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전북자치도는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격차로 비수도권이 인구 100만 도시가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특례시 제도가 수도권 일극 체계만 공고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지사(사진 왼쪽)가 23일 도청 기자실에서 완주·전주 통합특례시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히 하고 있다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등 적용해 줄 것을 정부와 미래위에 요청해 왔다.

미래위는 이번 개편방안에서 비수도권 인구감소를 예측하며 행정 효율성과 권역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거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은 특례시 인구 기준을 100만에서 50만(예시)으로 낮출 것과, 인구 기준 외에도 권역 내 거점 기능 수행 가능 여부, 인근 시군과의 연계·협력 가능 여부, 시군 통합 여부 등 정성적 기준을 함께 검토해 특례시를 지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특례시가 권역의 성장을 견인하는 거점 도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도의 권한도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시군 통합에 대해 시군이 자발적으로 통합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고 통합 후에도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현재의 통합 특례를 현재 상황에 맞게 보완하는 한편, 시군 통합 시기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을 차등화하는 등 빠르게 통합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최근 주민에 의한 통합 건의가 이루어진 지역은 완주·전주가 유일하므로 청주·청원보다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로 인정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였다.

전북자치도는 지난해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참여를 관련 시군에 제안해 놓은 상황으로 이런 재정지원 방안이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전북자치도는 "행정안전부가 미래위의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원단'을 설치하고,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행정안전부와 지속 소통하고 지역 정치권과 적극 협력하여 특례시 지정 등 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핵심 간선 교통망 14개 사업 국도·국지도 건설 예타 선정

(제6차)

'완주 상관~전주 색장 사업' 등 기재부 예타 대상 올라

전북자치도,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 추진... 경쟁력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핵심 간선도로망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14개 사업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일괄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국토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착수해 후보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으며, 이 중 타당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된 사업을 일괄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전북의 14개 사업은 기획재정부 전문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통해 경제성, 정책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받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최종 입증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국토교통부 도로정책심의회를 거쳐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으로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완주 상관~전주 색장(국대도) 사업'은 전주 외곽 순환망 51.7km 중 미개설 구간인 4.1km(총사업비 1,804억원)을 연결해 순환망을 완성하는 핵심 구간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전주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인근 시군 간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 소양~진안 부귀(국도26호선, 보통제) 사업'은 동부권의 관문 역할을 하는 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구간은 선형 불량과 급경사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정비 필요

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이전 계획에 포함되지 못했다.

이 사업은 3.0km 구간에 총사업비 698억 원을 투입해 도로 기하구조를 개선하고, 겨울철 강설로 인한 통행제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제 백구~공덕 및 공덕~군산 대야(국도21호) 사업'은 총 연장 15.4km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56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외 '정읍 칠보~임실 덕치(국도30호) 사업' 등 10개 사업은 이동 시간 단축 및 교통비 절감을 통해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차로, 급경사, 급커브 등의 위험 구간을 개선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며, 낙후된 지역의 경제 성장을 지원하여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자치도는 2021년부터 '전라북도 도로분야 국가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신규 사업 발굴과 경제성 확보에 철저히 대비해왔다. 이러한 준비 끝에 14개 사업이 일괄예타 대상사업에 포함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전방연구원, 지역 정치권과의 체계적인 공조를 통해 이룬 결과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정책성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정책성 분석 대응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을 보완하고,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을 강화해 예타 통과율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도내 관광명소 8곳 '2025~26 한국관광 100선'

전주 한옥마을·정읍 내장산국립공원·부안 변산반도 등

택한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급종 수령방법은 농업인이 직접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신청한 종자의 품종 및 수량을 확인하고 종자대금을 납부한 후 공급받으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063-530-3620),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 관광지 8곳이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됐다.

선정된 관광지는 △전주 한옥마을 △정읍 내장산국립공원 △완주 오성한옥마을 △진안 마이산도립공원 △무주 반디

랜드&태권도원 △순창 강천산국립공원 △부안 변산반도이다.

'한국관광 100선'은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한국과 외국 관광객들에게 꼭 방문해야 할 대표 관광지를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발표된다.

이정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전북의 주요 관광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자연과 전통, 문화가 조화로운 전북자치도를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마음만큼 따뜻한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전주매일 임직원 일동 -

국립종자원 전북 "2025년도 콩·팥 정부보급종 신청하세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병준)에서는 2025년도 콩·팥 정부보급종(이하 보급종)을 대상으로 2월 3일부터 3월 17일까지 전북지역 시·군 농업기술센터(농업인상담소 포함)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2025년도 콩·팥 보급종 신청·공급 물량은 280.5톤으로 기계수확 작업이 용이한 장류콩 2품종 276톤(소독), 팥 1품종 4.5톤(미소독)이며, 5kg(1포) 단

내달 3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시군 농기센터 등 통해

위로 신청할 수 있다. 품종별 공급내역으로는 콩은 선종과 대찬, 팥은 아라리 등이다.

아울러, 보급종은 출고 이후 신청내역(품종, 수량 등에 대해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청 농가에서 변경 및 취소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출고 이전에 접수기관 또는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으로 신청해야 된다.

또한, 종지구입확인서는 신청한 농가 명으로만 발급되므로 대리신청 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반드시 농업인 본인 이름으로 신청해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한 종자는 품질보증이 완료된 시점부터 5월 9일까지 종자신청 시선

설 명절 연휴로 2월 2일까지 신문 습니다.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TOP MARU